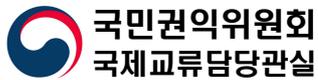

2018년 OECD 청렴작업반회의 및 청렴포럼, 청렴네트워크 참석 보고서

2018. 4



목 차

1.	2018년 제1차 OECD 청렴작업반, 청렴 포럼, 청렴 네트워크 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6
붙임 1	회의 일정.....	25
붙임 2	발표 자료.....	29
붙임 3	공공청렴을 위한 행동과학적 고찰(번역·요약).....	39
붙임 4	청렴 네트워크 회원기관(15개).....	48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3. 26(월)~30(금)/프랑스 파리 OECD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 회의 구성
 - **청렴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연2회)
: 청렴/반부패 정책 설계 및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경험 및 모범사례 발표, 정책적 시사점 공유 등
 - **청렴포럼**(Integrity Forum, 연 1회)
: 청렴 반부패 증진을 위한 연례 OECD청렴주간(13-)의 주요 고위급 행사
 -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Integrity Network Workshop, 연 1회)
 -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가 “열린정부 파트너십” 정상회의(16.12.7~9, 프랑스 파리) 및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세계 각국 투명성·윤리·청렴성 업무 담당 정부기관 간 “국제 청렴 네트워크”(Network for Integrity) 출범 제안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윤동호 과장, 안재현 주무관
 - ※ 주OECD대표부 김재출 참사관
 - 30여 개국 대표단

- 1 -

□ OECD 청렴작업반회의, 청렴 포럼, 청렴 네트워크 주요 결과

-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포럼은 부패방지 관련 정책과 시스템 마련보다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됨.
- 국제화에 따른 국가별 부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제도적 불투명으로 인한 부패 문제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범지구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한 투명한 사회 시스템 건설** 필요성이 강조됨.
- 지방정부의 정책과 운영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주의, 지·혈연관계, 지방사업 인허가 문제 등 부패문제에 더욱 취약함을 지적하며, **선출직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 또는 토착 세력과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은 정책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됨.
- 또한 **공공 인프라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업무 종사자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행 방안으로 △정부의 인프라 분야 반부패 정책 비전 설정, △인프라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의 청렴 교육 시행, △기업 내 감사 담당자들의 청렴 훈련 강화 등이 제시됨.
- 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해서 **조세 기관과 반부패 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자금추적 등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조세 회피, 자산 은닉, 자금 세탁 등을 통한 부패 행위 적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함.
 - 또한 이러한 기관간 협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 **해의 너물 등 주요한 국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공유됨.

- 2 -

- **스포츠 분야 부패방지 이슈**가 여러 세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정치나 조세 관련 이슈보다 **부패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스포츠 부패 방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 정부의 정책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기업의 반부패 의지와 집단행동**이 필요하며, 대중에 대한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 저널리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언급됨.
- 청렴네트워크는 ① 공공부문내 윤리, ② 공직 투명성 촉진을 위한 디지털 수단과 공공 데이터, ③ 부패척결에 대한 국제적 경험, ④ 부패방지 교육 등 4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2-3년 주기로 실무그룹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함.
 - 위원회는 **상기 실무그룹 중 ‘공공부문내 윤리’에 참여**를 희망함.
- 또한 금년 **청렴네트워크 총회를 12.10-11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며 위원장 참석을 요청함.

□ 정부 대표단 활동

- OECD 청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공공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 이행을 위한 툴킷 개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권고문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언급함.
- 청렴 네트워크 워크샵에서 '17년도 회원 기관 설문조사 요약 보고서에 대하여 향후 전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인지 문의하며, 발간시 도표 등에 비율(%) 표시 외에도 개별 국가를 표기해 주는 것이 향후 자료집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 3 -

- 또한 사무국에서 제시한 2018년도 계획(3가지)을 한 해 활동 목표로 삼기에는 많은 것으로 평가, △ 1가지 주제를 정해 효율성 있게 이행하는 방안 혹은 △ 2년 단위의 계획을 작성하여 주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청렴 네트워크 워크샵의 패널 토론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신고 제도**를 소개하며 신고 절차 및 접수 경로, 신고 내용별 분류 방법,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소개함.

□ 관찰 및 평가

- 청렴작업반회의(SPIO)와 청렴 포럼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청렴 구현이 국제적 반부패 **원칙과 정책을 개발하는 하는 단계**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경쟁적으로 새로운 원칙을 개발해온 과거 트렌드와는 달리 **중복적인 정책 개발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부패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노력에 따른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부진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앞으로 부패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OECD 사무국은 작년에 이어 금년 포럼에서도 **부패에 대한 행동학적 분석론**을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였으며, 최근 발간한 상황별·성향별로 부패를 일으키는 요소와 심리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관찰됨.
 - * 첨부3 번역·요약자료
- 세션 발제 중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이 부패 극복과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예시로서 몇 차례 언급되며, 반부패·청렴 관계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4 -

- 청렴 포럼 계기에 참석한 학술기관, 시민사회 단체 중 EU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ERCAS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가별 공공청렴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IPI(Index of Public Integrity)를 개발, 국가별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함.
- 사법 독립성, 행정 시스템, 무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e-citizen, 언론 자유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함.
※ 한국은 2017년 기준 109개 국가 중 23위를 차지
- ERCAS는 IPI가 세계은행, IMF, UN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공공청렴성을 측정하는데 차별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IPI를 ‘인식’을 측정하는 CPI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시킬 의향을 강력하게 표명함바, **향후 동 지표의 활용 및 인지도 등 발전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됨.

2 세부 회의 결과

1. OECD 고위급 청렴작업반 회의(3.26)

□ 1. 개회

- Mary Anne Stevens 청렴작업반회의(SPIO) 의장과 Janos Bertok OECD 공공청렴국장이 환영사를 통해 OECE 청렴작업반회의(SPIO)는 기존의 청렴전략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별로 다양한 문화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이행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OECD는 이번 청렴작업반 회의를 공공고용관리(Public Employment Management) 실무그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청렴작업반회의와 연계하여 청렴주간 중 개최되는 다른 회의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함.

□ 2. 청렴 정책 이행을 위한 전략과 개발 틀

- 국가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청렴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바, 「공공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에 반영시키기 위한 청렴 정책 이행 수단 및 툴킷에 대한 의견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함.
- Andrew Preston 영국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12월부터 영국에서 새로운 국가적 반부패 정책을 발표했음을 알리며, 동 정책 이행을 위한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음을 소개함.
- 동 프레임워크의 주요 3요소는 △정부의 의지, △부패 사건의 증거 문서화, △기관간 협력(다양한 분야의 부패 문제 해결)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이는 반부패 전략이 경제 범죄 또는 조직화 범죄 등의 관련된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Mora Kantor 아르헨티나 부패방지사무국 대표는 아르헨티나가 공공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고 △공공 기관·종사자에 대한 제어(모니터링), △윤리적 딜레마 등에 대한 조언, △전략·훈련 등의 제도적 개혁 등 3가지 영역 중심으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Ethnic Lin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관련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고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결과를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히 조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직별·기관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각각 상이함을 고려하였으며, 이해충돌에 대한 원칙과 함께 부패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명문화하였음.
- Julio Bacio Terracino OECD 공공청렴국 부국장은 「공공 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시행을 위한 툴킷(tool kit) 개발 방향과 함께 향후 청렴작업반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세부 주제와 참여방법에 대해 소개함.
- 향후 논의될 세부주제로는 △툴킷의 직접적 수혜자 구체화, △툴킷 개발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제안, △ 이행 여부·정도에 대한 측정방법 등이 있으며, 기존에 자체 툴킷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사례를 공유해주시기를 요청함.

- 7 -

- 스웨덴, 이탈리아는 툴킷 개발 의도와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적·정치적 환경에 일괄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바, Terracino 부국장은 이에 대해 권고문 이행을 위한 모델이 필요하며 국가별 도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나 툴킷 개발의 다음 단계에서 국가별 적용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 3. 2019년 공공청렴지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공공청렴지표(Public Integrity Indicators) T/F는 개발한 공공청렴지표 프레임워크 초안을 소개하며 동 지표가 국가별 청렴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도식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공공청렴지표 T/F팀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 개발을 시스템, 문화, 책임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분야를 세분화 함.
- 문화적 측면, 법적인 측면, 결과론적인 측면 등 어떠한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표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표 선정 → 지표 이행을 위한 기관·조직과 역할 정의 → 조사방법 → 세부 지표 선정 → 점수화 또는 수치화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 영국은 청렴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전략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구체적 측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표 개발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8 -

□ 4. 공공고용관리(PEM) 실무그룹과 통합 세션 “청렴과 인적 관리 : 공공 윤리를 위한 동반자”

- Marcos Bonturi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과 Anne Rivera 청렴작업반 회의(SPIO) 부의장, 그리고 Simon Claydon 공공고용관리(PEM) 실무 그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300여개의 회의체가 OECD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렴주간」을 계기로 관련 회의체간 통합 세션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소개함.
- 청렴작업반회의를 통해 논의되었던 가치와 반부패 전략이 공공 기관의 고용 및 인적관리 측면에서 이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를 기대함.

□ 5. 공공윤리기구 강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와 이해충돌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함. 인적 관리를 통하여 청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OECD 회원국의 핵심 공공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함.
- (호주) 독립국회재정국(Independent Parliamentary Expenses Authority)이 최근 시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회(opportunity)와 압박(pressure), 합리화(rationalization)를 통해 조직 내에서 개인의 윤리적 업무수행 장려할 수 있음을 소개하며 이를 위한 인사당국(Human Resource)의 역할을 강조함.
- 보상, 승진, 훈련, 감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조직내 청렴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 발생 후의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 9 -

중요한바 채용단계에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청렴성을 갖춘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EU-EPSCO*) EU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과 평가 요소 등을 소개하면서 각 단계별로 정보공개와 자동화·전산화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음을 언급함.
- * EPSCO : EU 및 산하 기관이 채용 및 인적관리를 대행하는 조직으로서, '10년부터 지금까지 총 54만건 이상의 채용을 대행

□ 6. 공공분야 청렴문화 선도

- OECD 사무국은 청렴작업반과 공공채용관리 실무그룹이 공동으로 연구한 「청렴 리더십」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이 청렴성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기관장 또는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 관리자 개인이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과 조직을 청렴하게 관리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청렴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인사관리에서 관리자에 대한 승진 및 보상여부 검토시 청렴 관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노르웨이) 공무원 청렴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관련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이며, 게임과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함.
- (미국) 공공기관 윤리 관리를 위해 3개의 연방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언급함.

- 10 -

- (프랑스, 모로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인 체제도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함.
- (포르투갈) 개인이 처한 이해충돌 상황 또는 조직적 문제에 대해 직속 상사 또는 관리자에게 상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조직 차원에서 윤리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직의 윤리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공공채용관리 실무그룹 대표) 4차 산업시대에 청렴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규정 준수 등 수동적인 대응 방안보다 예방을 통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조직 운영, 구조적 개선, 윤리 원칙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부언함.

2. 청렴 포럼(3.27-28)

□ 개회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Katrin Jakobsdottir 아이슬란드 총리, Ema Solberg 노르웨이 총리, Gabriela Michetti 아르헨티나 부통령, Franc Timmermans EC(European Commission) 제1 부통령이 참석함.
- Gurria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 회원국 국민의 42%만이 자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3% 하락한 수치로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앞으로는 소득과 분배를 고르게 고려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하며, 부의 분배가 아니라 기회의 분배를 통하여 국제화 시스템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함.

- 11 -

□ 패널 토론 : 공정한 국제화를 위한 청렴성의 경향과 결립들

- Gabriela Ramos OECD 비서실장 겸 G20 세르파는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적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혜택받지 못한 국가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국제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이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패와 비윤리적 시스템 운영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함.
- Solberg 노르웨이 총리는 TI의 CPI 순위에서 노르웨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 또는 조달 계약 등 공공 기관 업무 대부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국제화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Jakobsdottir 아이슬란드 총리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도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유소년의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SNS, 기술변화 등 미래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언함.
- Michetti 아르헨티나 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부패 문화와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반부패 실무그룹을 통하여 공기업 청렴성, 이해충돌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12 -

- Timmermans EC 제1부총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에 대하여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득권층이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조직과 구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
- Delia Matilde Ferreira Rubilo 국제투명성기구(TI) 의장은 국제적 부패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국제적 규범 이행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 조사 저널리즘,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서 4개의 알파벳 I (△더 많은 정보(Information), △더 높은 청렴성(Integrity), △감소하는 불의(Impunity), △줄어드는 무관심(Indifference))가 필요하다고 부언함.

□ 동시 세션 : 지방정부 청렴성

- Kristien Verbraken(Public Governance Flanders) 세션 진행자는 OECD 평균 공공사업 예산 40%와 공공투자금액 60%이 지방정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 정부의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중앙정부에 비하여 지방정부는 조달관련 뇌물, 친족주의, 인허가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비리 등에 더 취약한바,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Gustavo Ferrari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법무장관은 부패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13 -

-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정부는 대부분의 정책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함.
- Serena Lillywhite TI 호주 CEO는 지방정부의 부패 문제가 ‘회전문’처럼 이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호주의 채굴 산업을 예로 들어 채굴 인허가 담당자가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등 취약 분야의 연결 고리를 끊기가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함.
- 또한 패널들은 지방정부 선출직 등 리더들의 정치성향 또는 토착 세력들과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운영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함.

□ 패널 토론 : (공공 인프라) 청렴성 기초 다지기

- Tina Fahm UK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위원은 공공 인프라 건설은 부패 문제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며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조달, 부동산, 엔지니어링)가 서로 연계되어 상호간에 악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양성한다고 언급함.
- Nancy Higgins Betchel 윤리 준법 전문관은 인프라 건설 분야 종사자 대부분이 부패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언급함.
 - 또한, Higgins 전문관은 ISO37001이 기존의 규율과 비즈니스 윤리 규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여 ISO 규정에 맞추는 것은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노력이라는 견해를 밝힘.

- 14 -

- Martin Manuhwa WFEO(세계엔지니어링기구연맹) 부총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렴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 기술적인 훈련 외에 부패 방지나 윤리 함양에 대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 직업훈련 과정에서 분야별 부패 취약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산업군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부언함.
- 패널들은 공공 인프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차원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반부패 비전 설립, △개방성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공공 가치를 준수하며 책임있는 기업운영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

□ 패널 토론 : 조세 기관과 반부패 당국간 협력 강화

- Grace Perez-Navarro OECD 조세정책센터 부국장은 세금회피, 뇌물 등 금융 범죄와 관련된 부패행위가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밝혀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금 추적등 기관간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요함을 강조함.
- Drago Kos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과거에는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뇌물을 활용하는 것을 당연한 기업 운영비용으로 여겼으나 현재는 이를 심각한 부패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세와 반부패 기관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상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특정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 15 -

- Don Fort 미국 국세청 범죄조사국장은 미국의 경우 세금과 관련된 범죄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반적인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FBI에서 나누어 조사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국내적으로도 기관간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국제적 협력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몇 년 전 있었던 FIFA 부패 스캔들은 Blazer FIFA위원의 세금문제 조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동 사건에서 국세청과 FBI, 검찰 등이 협력하여 조사하였던 사례를 소개함.
- 또한 최근 가상통화를 조세 회피를 통한 자산은닉,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력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Richard Findl 독일 검찰청 부장검사는 조세당국과 부패방지 당국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으로 △조세당국의 정보를 검찰 또는 부패사건 조사당국과 공유, △양측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기업 내 조세 감사관에 대한 정기적 훈련 등을 언급함.

□ 동시 세션 : 스포츠 분야 청렴성

- Nicola Bonucci, OECD 법무국장은 스포츠의 분야별, 협회별, 기관별로 발생하는 부패사건은 스포츠 분야의 공동된 거버넌스 원칙이 부재함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스포츠 분야의 부패 위험성을 줄이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스포츠 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2017년 스포츠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2017 of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against Corruption in Sport)」이 체결된바 있으며, G20, OECD 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함.

- 16 -

- Francesco Ricci Bitti, ASOFI(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 President는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관련 스포츠기구가 30개가 넘는다고 언급하며 이 외에 언론, 금융 등 관련 이해관계자간 청렴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함.
- Paolo Bertaccini 이탈리아 스포츠부 자문관은 이탈리아 정부가 UN 스포츠분야 부패방지 결의안을 바탕으로 국내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스포츠 부패에 대한 인지도 향상, 부패 척결을 위한 관계자들의 의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을 3가지 주요 요소로 꼽음.
 - 또한 4월 19일 로마에서 UN 스포츠 부패방지 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소개하며 관심 있는 정부의 대표단 파견을 요청함.
- 패널들은 경쟁, 스폰서쉽 등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부패방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스포츠 행사 개최, 구단 관리, 양성 평등 등 스포츠 내 세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 부패 방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함.

□ 동시 세션 : 청렴에 대한 새로운 관점

- Andrew Spalding 리치몬드대학 법학교수는 “올림픽의 반부패 유산”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올림픽 개최국들을 부패 방지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를 소개함.
 - 브라질, 한국, 중국, 프랑스는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기간 중 크고 작은 부패 스캔들을 통해 반부패 개혁이 일어났으며, 이는 올림픽 개최가 정치적·사회적 반부패 의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 17 -

- 또한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가치가 스포츠를 넘어 기업운영, 정치 등 올림픽 개최국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올림픽 개최 후에도 유지된다고 분석함.

□ 패널 토론 : 공평한 국제화를 위한 청렴 전략, 시행, 영향

- Arely Gomez Gonzalez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은 멕시코 정부가 ‘17부터 시민참여위원회(Citizen Particip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이 정책논의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정부의 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Joseph Simon Nilfisk 국제준법담당관은 러시아 선박업계의 부패문제를 예시로 들며 비즈니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 중 일부만이 청렴한 운영을 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함.
 -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업체가 청렴한 운영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익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렴한 기업 운영에 대한 협력의 기초를 마련된다고 부언함.
- John Penrose MP 영국 총리 반부패 챔피언은 국가적 부패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국이 부패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들었으며, 다음 단계로 청렴성과 경제 발전이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Monique Villa Thomson Reuters 재단 CEO는 가짜뉴스(Fake news)와 불공정한 언론보도가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이는 저널리즘의 투명성과 청렴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 18 -

- 지난해 옥스퍼드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만이 언론 보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 저널리즘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3.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3.29-30)

□ 청렴 네트워크 활동 논의

- 청렴 네트워크 사무국은 아르메니아 고위공무원 윤리 위원회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여 총 청렴 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총 15개로 늘었음을 알리며, 멕시코 National Institute for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이 2년간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소개함.
- ‘17년도 진단 설문조사 결과 요약문과 ’18년도 업무 계획을 사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회원국들에게 공람한바,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 계획에 대하여 논의함.
- (아르메니아) 공공분야 윤리, 오픈 데이터 관리 툴 개발, 반부패 경험 공유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한 실무그룹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에 대한 실무그룹을 추가할 것을 요청함.
- 또한 각 실무그룹은 주제별로 관련성 높은 기관을 지정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전략 계획을 공유하고 회원국들간의 의견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인터넷 포털 등)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19 -

- (위원회) 이미 1사분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한 해 활동 계획으로 삼기에는 사무국에서 제안한 주제 개수(3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바, 1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방안 혹은 2-3년 단위 계획을 작성하여 장기 활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실무그룹 신설과 관련하여 실무그룹의 활동과 범위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최종 결정은 금년 중 개최될 청렴 네트워크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언함.
- 더불어 실무그룹의 활동 기간과 단계별
- (크로아티아)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 맞추어 실무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함. 또한 각 실무그룹별 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내에 성과를 도출하는 등 타임 프레임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루마니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실무그룹 주제에 교육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함.
- 사무국과 회원기관들은 실무그룹의 주제를 ① 공공부문내 윤리, ② 공직 투명성 촉진을 위한 디지털 수단과 공공 데이터, ③ 부패척결에 대한 국제적 경험, ④ 부패방지 교육 등 총 4개로 정하고, 각 주제별로 2-3년 주기로 실무그룹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함.
- 위원회는 상기 실무그룹 중 ‘공공부문내 윤리’에 참여를 희망함.
- (멕시코) 12월 9일 세계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금년 청렴네트워크 총회를 12.10-11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며 위원장 참석을 요청함.

□ (패널토론1) 정보 수집 툴 : 문서화의 결립들

- (GSAC, 그리스) 그리스 정부는 최근 재산공개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운영 중이며, 조세당국과 국내 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20 -

- 그리스의 재산공개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의 사주 및 기자 등 언론인을 포함함을 부연함.
- (CSB, 조지아) 조지아의 온라인 재산등록 시스템은 재산공개 외에 개인의 신상 관련 정보(가족관계, 사업체 종사여부 등)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 제출된 자료 중 5%를 위원회가 선정하고 다른 5%를 전산상에서 랜덤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며, 특정 인물에 대한 검토를 개인이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함.
- (ANI, 루마니아)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시스템을 전환함에 따라 매년 30만건 이상의 재산신고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루마니아 또한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재산신고(부동산, 금융자산, 소득 등)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신고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설명함.

□ (패널토론2) 정보 수집 틀 : 이행 방향성

- (HATVP, 프랑스) 프랑스 고위공무원 16,000여명을 대상으로 각각 3가지 재산 항목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됨을 설명함.
- (CEHRO, 아르메니아)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서, 약 750명의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 대상임을 소개함.
- 현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 시스템으로서 재산신고 내역 공개가 용이하며, 자체 내장된 분석시스템으로 위험요소가 사전에 파악 가능하다고 부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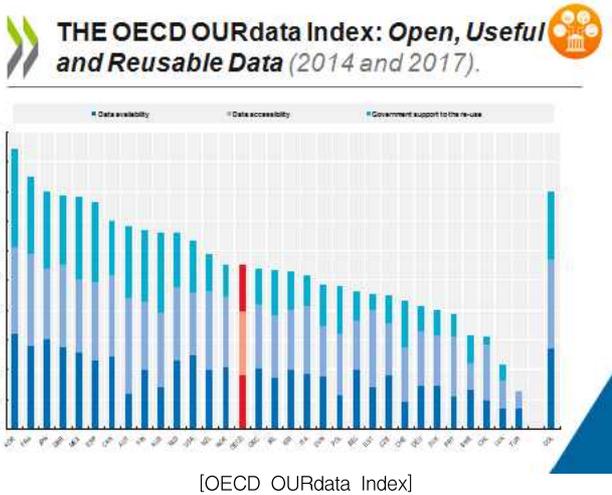
- (SIPO,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로비스트, 로비 대상자, 주제,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로비 등록제도’를 ‘15년 부터 시행중임을 소개함. (현재까지 1,713명의 로비스트가 등록)
- (권익위, 문소회 사무관) 위원회의 부패신고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함.
- 부패신고는 방문, 전화, 인터넷, 출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다양한 상담 경험이 있는 직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퇴직 공무원 등이 전문 상담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 접수된 부패신고는 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과로 배정된 다음, 조사관의 심사와 확인,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원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 기관에 이첩함.
- 또한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의 포털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바,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패널토론3)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 : 외부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 라트비아(KNAB), 루마니아(ANI), 슬로베니아(CPC), 우크라이나(NACP)가 각각 자국의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을 소개하며 홈페이지를 시연함.

□ (패널토론4) 데이터 공개와 정보 전산화 방안 접근

- (HATVP, 프랑스) 프랑스는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 로비활동 등록제도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 공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18.3월 현재 40%의 재산 정보가 공개되고 1,062명의 로비스트가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개함.
- 정보공개를 통하여 고위공직자들과 로비스트 활동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제고되었고, 몇몇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개된 정보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
- (OECD) 많은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 운영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와 경제 분야의 급속한 디지털화, △보다 편리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보다 정보화되고 긴밀하게 연계된 사회 체제 속에서 공공정책 의사결정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의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음을 설명함.
- OECD는 '12년부터 ODG(Open Government Data)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며, 1단계 working paper, 2단계 Open government 자료 조사, 3단계 ODG 국가별 심사, 4단계(현재) 정보공개 보고서 및 OURdata Index* 발표를 체계적으로 이행중임.
- * OURData Index는 정보 이용성, 정보 접근성, 정보 재사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측정되며, 한국은 33개 조사대상국 중 1위를 차지



-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한 이후로 해당 국가들의 CPI 점수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발표자는 OECD와 TI의 최근 회의 결과에 따르면 CPI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정보들이 국민의 생활과 정령도 향상 등의 여러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할 결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CPI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함.

붙임 1 회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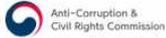
3.26(월) : 청렴작업반회의	
08:30~09:30	등록
09:30~09:45	1. 개회 • 환영사 : Mary Anne Stevens, 청렴작업반회의(SPIO) 의장 Janos Bertok, OECD 공공청렴국장
09:45~11:30	2. 청렴 정책 이행을 위한 전략과 개발 톨 • Andrew Preston, 영국 부패방지국장 • 아르헨티나 부패방지사무소 • Julio Bacio Terracino, OECD 공공청렴국 부국장 • 토론주제 : 국가적 청렴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 일관성 있는 청렴 시스템과 공공 청렴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
11:30~12:00	커피 브레이크
12:00~13:00	3. 2019년 공공청렴지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공공청렴지표(Public Sector Indicators) T/F 팀원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 Frederic Boehm, OECD 공공청렴국 정책분석가 • 토론주제 : T/F 팀에서 만든 평가 시스템(프레임워크)이 총체적인 청렴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가? 청렴 시스템이 평가 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비교 측정될 수 있는가?
13:00~14:30	점심
14:30~14:45	<공공고용관리(PFM) 실무그룹과 통합 세션> “청렴과 인적 관리 : 공공 윤리를 위한 동반자” 4. 개회 • Marcos Bonturi,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 Mary Anne Stevens, 청렴작업반 실무그룹 의장 • Simon Claydon, 공공고용관리 실무그룹 의장
14:45~16:00	5. 공공윤리기구 강화 • 청렴작업반 대표 • 공공고용관리 대표 • 토론주제 : T/F 팀에서 만든 평가 시스템(프레임워크)이 총체적인 청렴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가? 청렴 시스템이 평가 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비교 측정될 수 있는가?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7:50	6. 공공분야 청렴문화 선도 • 청렴작업반 대표 • 공공고용관리 대표 • 토론주제 :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관리자 지원 방안 공공청렴취약분야 파악을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방안
17:50~18:00	7. 폐회 • Marcos Bonturi,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 Mary Anne Stevens, 청렴작업반 실무그룹 의장 • Simon Claydon, 공공고용관리 실무그룹 의장

3.27(화) : 청렴 포럼		
08: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사	
10:00~11:30	패널 토론 : 공정한 국제화를 위한 청렴성의 걸림돌과 경향	
11:30~12:00	네트워킹 브레이크	
12:00~13:30	동시 세션	
	A. 비재판결의를 통한 해외 뇌물 사건 해결	B. 지방정부 청렴성
	C. 청렴성과 무역 : 바위에 기름칠 할 필요가 없다.	
13:30~14:00	휴식	
14:00~15:30	동시 세션	
	A.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 청렴에 대한 행동력 통찰력	B. 부패 근절 : 조사 저널리즘의 중요성
	C. 공공조달분야 청렴 : 정보 분석과 공급자 배제	
15:30~16:00	네트워킹 브레이크	
16:00~17:30	공공 인프라 : 청렴 저변 확립	
3.28(수) : 청렴 포럼(계속)		
08:30~09:30	등록	
09:30~11:00	세금, 책임 있는 기업 운영과 기관 간 협력	
11:00~11:30	네트워킹 브레이크	
11:30~13:30	동시 세션	
	A. 스포츠 분야 청렴성	B. 공기업 반부패 청렴 가이드라인
	C. 정책 결정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	
13:00~13:30	휴식	
13:30~15:00	동시 세션	
	A. 암흑물질에 빛 비추기 : 거버넌스 집 부패와 불법 거래	B. 취약분야 부패 위험 관리
	C. 아이들은 괜찮다 : 공공청렴 교육	
15:00~15:30	네트워킹 브레이크	
15:30~17:00	패널 토론 : 공정한 국제화를 위한 청렴성의 전략, 시행, 영향	
17:00~17:15	폐회	

3.29(목) : 청렴 네트워크	
09:30~10:15	개회사
10:15~11:00	청렴 네트워크 활동 업데이트
11:00~11:30	커피 브레이크
11:30~13:00	패널토론 1. 정보 수집 톨 : 문서화의 걸림돌
	- GSAC (그리스)
	- CSB (조지아)
	- ANI (루마니아)
	- Commission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크로아티아)
- 토론	
13:00~14:30	점심식사
14:30~16:00	패널토론 2. 정보 수집 톨, 이행 방향성
	- HATVP (프랑스)
	- CEHRO (아르메니아)
	- SIPO (아일랜드)
	- ACRC (한국) : 부패신고의 분류 및 처리 절차 소개(문소회 사무관)
- 토론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8:00	패널토론 3.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 : 외부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 KNAB (라트비아)
	- ANI (루마니아)
	- CPC (슬로베니아)
	- 토론
3.30(금) : 청렴 네트워크(계속)	
09:30~11:00	패널토론 4. 데이터 공개와 정보 전산화 방안 접근
	- NACP (우크라이나)
	- HATVP (프랑스)
	- OECD
	- 토론
11:00~11:30	커피 브레이크
11:30~12:30	폐회식

Management of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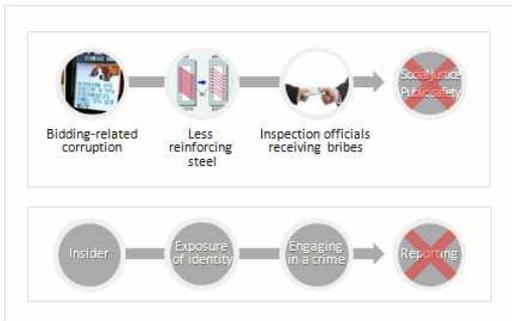


CONTENTS

- I Background
- II Overview of corruption reporting system
- III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 IV Protection & rewards for whistleblowers



I . Background



II . Overview of corruption reporting system

Acts of corruption to be reported

- The act of a public organization employee to seek illegitimate gains by abusing his/her position or authority, or violating laws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 Malpractices/wrongdoing between private persons
- Grievance against public service delivery
- Unkindness of a public official
- A civilian who committed corruption when he/she was a public official

corruption report +

corruption Report ○



III .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Reporting corruption

"Any person may report an act of corruption, but a public official shall do so immediately"

Citizen → ACRC

Public official → To an investigative agenc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CRC

- 3 - 

III .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Reporting corruption

- Reporting: Internet, Smartphone app, visit, FAX, post, etc.
 - If suspicion of corruption is found in the general complaint received by ACRC, the complaint will be handled as a corruption report with the complainant's consent
- Consultation: Internet, visit, hotline

- Electronic billboard ads in subway st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 Special reporting period in specific areas
- Public organizations' activities to promote corruption reporting (adding a link to ACRC's corruption reporting webpage, etc.)
- Online events
- Media reports on closure of reported cases and provision of financial rewards

- 4 - 

III .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Reporting corruption Receiving reports

Corruption Reporting Center

Examining documents
Verifying basic facts

Report with high possibility of corruption → Designation of inspection unit
Notifying the receipt of reports

General complaints → Termination
Notifying termination

- 5 - 

III .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Reporting corruption Receiving reports Examining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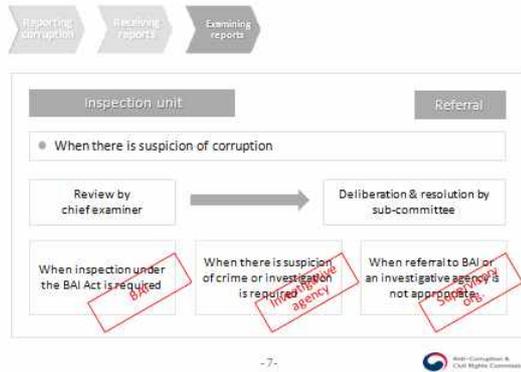
Inspection Unit

- Request for explanation and submission of materials by public organizations
- Fact-finding investig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on-site inspection)
- Request for attendance and statement by interested persons, reference persons, or public officials involved

Referral Accusation Forward Termination

- 6 - 

III.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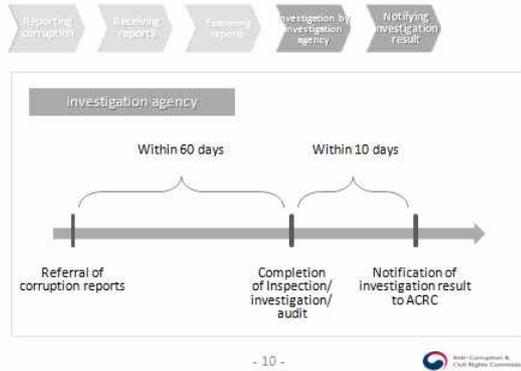
III.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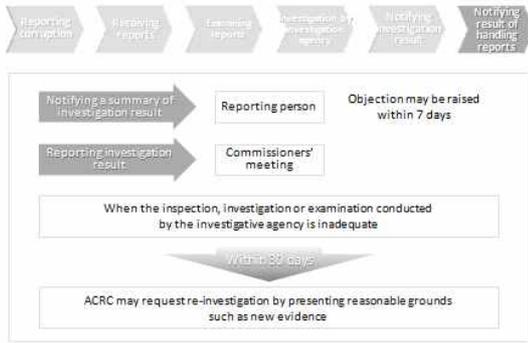
III.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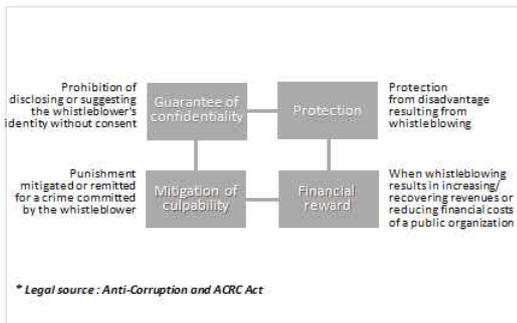
III.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III. Receiving & handling of corruption reports



IV. Protection and rewards for whistleblowers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the whistleblower's identity without consent

Examination on disclosure of the whistleblower's identity &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involved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for breaching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Personal protection

ACRC → Request for protective steps → Chief of the police agency

Proving a safe house for a certain period	Escort for attendance & return as a testifier or witness.
Keeping guard for a certain period	Periodic patrolling of the neighborhood

- 13 -

Korea'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s

Guarantee of employment

-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employment status including dismissal
- Prohibition of administrative disadvantage including cancellation of permit or license
- Prohibition of financial disadvantage including revocation of a contract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ction against whistleblowers & fine for negligence or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Mitigation of culp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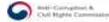
- Mitigation/remission of punishment
-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 Prohibition of the whistleblowee's claiming damages caused by whistleblowing

- 14 -

Rewards and awards

	Reporting of corruption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Rewards	Increasing or recovering revenues of a public organization * Up to KRW 3 billion , 4-30% of the assets to be recovered	Increasing or recovering revenues of a public organization * Up to KRW 2 billion , 4-20% of the assets to be recovered
Relief money		Damage caused due to whistleblowing * Expenses for physical or psychological treatment, moving caused by a job transfer, litigation procedures, etc.
Awards	Bringing financial benefits or preventing financial damage to a public organization , o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Bringing financial benefits or preventing financial damage to a national/local government agency o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 15 -



e-People System



- 37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4,066
Internet (e-People)	2,007	1,888	3,095	3,792	2,907	2,974	3,380
Postal	343	385	379	430	643	507	450
Visit	48	79	107	108	169	140	127
Fax	86	120	110	139	135	126	94
On-site	45	55	44	41	31	11	15

<Receipt of Report by the Channels>

- 17 -

Thank you.



- 38 -

- ◆ **(배경)** OECD는 정책담당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청렴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과학적 증거 제공을 위해 이보고서를 발간
- ◆ **보고서 주요 내용**
- ① **청렴정책의 인지 측면**
 - 전통적인 부패방지 노력은 합리적인 정책결정모델에 기반하며, 이는 통제나 제재 적용을 선호하는 정책권고로 귀결
 - 행동과학적 고찰은 간과되기 쉬운 두 가지 인지측면을 통합 고려
 - 첫째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에 기초한 윤리적 선택이며, 둘째는 사회적 역동성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이러한 역동성과 위험성을 통합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가 보다 효율적인 청렴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
- ② **행동과학의 주요 연구결과**
 - 일반적으로 청렴강화 정책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계
 -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윤리적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일관적이거나 단정적인 편
 - 따라서, 공공정책은 개인의 도덕적 기준점을 높이거나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윤리적 선택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임
 - 너무 많은 사람들 간에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청렴 위험성을 증가
- ③ **행동과학의 청렴정책 적용방안**
 - 이보고서는 행동과학 적용을 통해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청렴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제시
 - 첫째는 기존 청렴정책 및 시스템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행동 증거를 활용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행동위험 회피, 기존 정책 개선 및 특정행위 장려 등을 위한 제한적인 정책개입 방안임
 - 이러한 개입은 종종 넛지(Nudge)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 예를 들어, 개인들의 자발적 재산공개 유도를 위해 동료 공무원 중 96%는 이미 그들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

공공청렴을 위한 행동과학적 고찰 : 부패대응을 위한 인적요소 활용

1. 배경

- 청렴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공공이익과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
- 그간 많은 청렴정책들이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구해 왔으나, 여전히 행동학적 관점은 경시되는 경향
- 이보고서는 청렴정책을 위한 타당성 있는 행동과학적 통찰 제공
 - 청렴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과학 연구 자료에 대해 검토
 - 인간행동 관점에서 청렴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렴정책 수립에 기여

2. 보고서 주요내용

(1) 청렴정책의 인지 측면

- 청렴정책 수립과정에서 인간의 행태에 관한 측면은 종종 간과되는 경향
- 전통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합리적인 정책결정모델에 기반
 - 이는 통제나 제재 적용을 선호하는 정책권고에 이르는 결과로 작용
 - 아울러, 잘못된 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책결정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귀결

- 행동과학적 고찰은 정책결정권자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 수행
 - 첫 번째 측면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에 기초한 윤리적 선택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역동성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다시 말해, 청렴은 사회, 동료, 이웃 및 동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역동성과 위험성을 통합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가 보다 효율적인 청렴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

<호주의 가치 정렬 모델>

- 호주의 가치 정렬 모델은 조직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
 - 그룹 A : 환경에 관계없이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들로 구성
 - 그룹 B : 환경에 따라 부패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
 - 그룹 C : 적발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되는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
- 효율적인 청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세가지 다른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설계
 - 직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규범이 존중되고, 부패행위를 위한 기회가 최소화되어 있는 근무환경 제공
 - 효율적인 적발 및 억제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조직내 온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그룹 C)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비
- 청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조직내 청렴을 장려함으로써 정책수단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2) 행동과학의 주요 연구결과

- 일반적으로 청렴강화를 위한 정책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설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청렴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그들의 윤리적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덜 일관적이거나 단정적인 편
 -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행동이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
 - 이는 정당화 및 편향된 판단이 청렴 위반에 관한 인식을 흐리게 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공공정책은 개인의 도덕적 기준점을 높이거나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도덕적인 상기(moral reminder)”와 같은 작은 메시지가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내는데 충분하다는 다양한 증거가 존재
 - 이러한 도덕적 성찰의 순간은 다양한 정책으로 통합될 가능성
 - 또한, 도덕적 선택은 개인이 윤리적 유혹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발될 가능성
 - 아울러,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는 역효과를 가질 가능성

- 신뢰기반 규칙에 대한 과도한 모니터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무시하거나 심각한 부정행위를 위한 진입점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

<멕시코 사례 : 도덕적 상기(moral reminder)>

- 멕시코 정부는 행동과학적 고찰을 공무원 선물등록 정책에 적용
- 수령 선물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5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송
 - 적법성 : 수령 선물 등록은 당신의 법적 의무입니다.
 - 정직성 : 우리는 당신의 정직성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선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직성을 보여주세요
 - 불편부당성 : 선물을 수령하는 것은 당신의 불편부당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세요.
 - 사회성 : 당신의 동료들에 의해 일 년에 1,000건 이상의 선물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하세요
 - 제재 : 만약 당신이 선물을 수령하고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지 마세요. 등록하세요
- 선물 피크시즌인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신고된 선물건수에 대해 메시지를 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한 결과
 - 상기 메시지를 받은 집단의 선물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례는 작은 행동학적 넛지가 기존정책에 대한 준수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제제보다는 가치나 청렴에 호소하는 것이 행동변화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윤리적 선택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임
 - 청렴정책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개선될 가능성
 - 죄의식은 여러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할 때 작아지며, 각각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더 적게 느끼게 됨

-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은 청렴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
- 공공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청렴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신뢰 하에 이루어진 간접적인 상호주의 행동으로써 이해될 수 있음
 - 청렴정책은 청렴이 규범으로써 간주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러한 규범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나 제제간의 균형이 필요
 - 행동과학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서로 분리되었을 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
 - 예를 들어, 이러한 기능이 서로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집행될 때 신뢰 획득이 가능
- 공동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불명예를 제거하려는 집단은 공통적 행동 함정에 빠질 가능성
 -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개인의 동기만으로는 악순환을 깨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은 외부집단의 개입 및 엄격한 집행을 통해 조직적으로 규명되고 해소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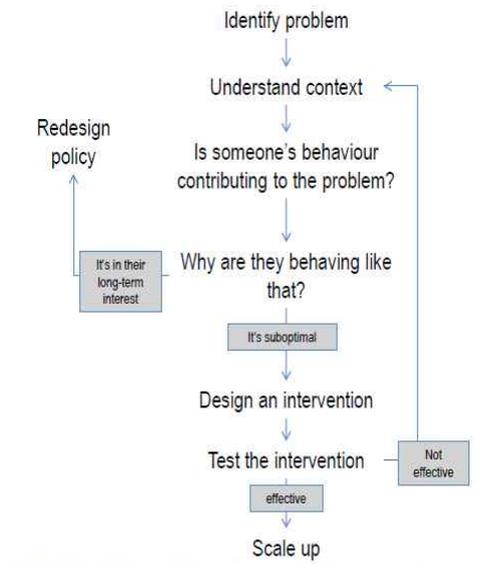
(3) 행동과학의 청렴정책 적용 방안

- 이 보고서는 행동과학 적용을 통해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청렴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제시
- 첫 번째는 기존 청렴정책 및 시스템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행동 증거를 활용하는 방안
 - 행동학적 접근법은 신뢰 제고 및 청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일부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
 - 행동함정(behavioural pitfalls)은 청렴시스템내에서 개인 각각에게 명확한 책임성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규명 가능
 - 책임성을 분산시키는 구조는 청렴 위험성을 증가
 - 특별히 높은 부패 위험성을 수반하는 절차에 통합된 윤리적 성찰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청렴이 간과되지 않도록 담보
 - 예를 들어, 문서실명제는 보다 강력한 윤리적 참여를 유발
- 행동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는 행동함정 회피, 기존 정책 개선 및 특정행위 장려 등을 위한 특정적이고 제한적인 정책개입과 관련이 있음
 - 행동학적 개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학적 편견, 인식제한 및 사회적 선호 등에 관한 지식에 기반
 - 이러한 개입은 종종 넛지(Nudge)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

- 45 -

-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에서부터 팀원 각자가 자신의 이해 충돌관계에 대해 공개하도록 요청
- 개인들의 자발적 재산공개 유도를 위하여 동료 공무원 중 96%는 이미 그들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

<행동학적 개입 흐름도 >



- 46 -

(4) 결론

- 행동과학은 부패대응에 있어 인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청렴정책을 위한 영감 제공
- OECD는 그 간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이 행동과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윤리적 행위에 관한 통찰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을 위한 출발점임

붙임 4 청렴 네트워크 회원기관(15개)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
- 이탈리아 국가반부패청(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 그리스 반부패사무처(Secretariat General against Corruption)
- 루마니아 국가청렴원(National Integrity Agency)
-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National Anticorruption Center)
- 라트비아 부패예방척결청(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 크로아티아 이익충돌해결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 조지아 공직인사청(Civil Service Bureau)
-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National Agency on Corruption Prevention)
- 페루 고위반부패위원회(High Level Anti-Corruption Commission)
- 멕시코 국가투명성정보보호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te Data Protection)
-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 고위기구(High Authority for Good Governance)
- 세네갈 국가사기부패방지청(National Office of Fight against Fraud and Corruption)
- 아르메니아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Commission on Ethics of High-ranking Officials)